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



좌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본부장
사회	박유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사업지원 담당관
기조연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발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영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더글라스 지후아 정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아베 가츠토모 일본 도쿄덴키대학 교수 다케시 다마이 올림푸스 한국 의료총괄부부장 장은영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경제부장
정리	유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무관

— **이영근** 미래도시는 그 기능이 점점 집약적으로 변해 갈 것이고, 환경과 기술이 접목된 첨단 도시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쟁력 있고, 편리하며, 매력적이고, 깨끗한 도시를 늘 꿈꾼다. 2050년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 저탄소 도시,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비즈니스 전진기지다. 송도, 영종, 청라 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 역할을 다하며, 포용적 성장을 통한 세계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첨단 융복합 산업을 유치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융복합 테스트베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비전 전략 2030을 수립하여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 연구개발(R&D), 미래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에 중점을 두고 기업 유

치와 융복합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우수 자본이 결합된 국제업무지구,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헝진 등 중국의 경제특구와 지역 신구와는 스마트 도시 분야 등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웨이하이시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웨이하이관을 개관하고, 중국에 인천관을 개관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기업 가치사슬의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중일 3국 간 지방경제 협력부문과 한중일 FTA에 있어서 시범도시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중일 상생의 상호협력이 더욱 촉발되었으면 한다.

— **김명아, 이주영**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와 신보호부

역주위의 등장으로 한중일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지방경제협력 시범 사업과 아이디어는 중국이 선행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일 간 지방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산둥반도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 시스템에 있어서 인근 지역과 협력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였다. 한중일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오랫동안 경제 교류를 해왔으나,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에 비해 경제협력 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대화 채널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경제협력은 한중일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을 견인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역과 국가급 신구로 지정된 다롄과 헝진, 칭다오와 한국의 인천, 일본 도쿄권과 후쿠오카 지역이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지역으로 도출됐다.

인천은 수도권을 배후로 한 상품·서비스 무역거점의 역할을 하고, 경제특구별 지역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한중일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는 점과 점을 잇는 선형 협력이 아니라 특구별 산업특성에 맞게 가치사슬을 연계할 수 있도록 권역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한중일 거점도시 간 경제협력 추진은 견고한 정책 수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 간 법률적 차원의 협력과 운영상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책협력, 둘째, 한중일 교통인프라 구축 및 물류 증진, 셋째,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통관 간소화, 해외직구 편리화, 전자통관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무역편리화, 넷째,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 지역에 대한 투자 활동 활성화, 다섯째, 산업금융 협력, 여섯째, 한중일 거점지역에 특화된 관광개발, 공무원 교류, 출입국 규제 완화, 의료교육 개방 등의 정부 및 민간교류 차원에서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것

을 제안한다.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 구상은 중국 다롄 북동부, 칭다오 남부, 헝진 중서부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하여 개별 협력사업을 구축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은 도쿄권, 후쿠오카 권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인천의 물동량과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선도적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천을 거점 삼고 한중일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야 하며, 지역 간의 협력과 함께 권역별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과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각 거점 지역의 산업정책과 개방 수준을 고려하여 진출기업의 업종과 투자 방식이 결정되어야 하며, 향후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 지역 개발과 교류 협력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 간 의지와 정책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및 민간교류를 통해 공동 개발사업, 공동 투자사업 등 다양한 민간 협력사업을 발주할 필요가 있다. 산업금융 및 협력이 뒷받침되고 각국 간 내용이 공유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무역 편리화를 통한 상호 인증 작업이 이루어져 무역 자유화로 이어져야 한다.

— **더글라스 지후아 정** 경제특구는 하나의 특별한 구역을 지정한 제도로 나머지 경제지역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원스톱서비스와 잘 구비된 인프라(항구, 항만, 도로, 전력)와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는 곳이다. 경제특구의 직접적 혜택은 일자리 창출, 환율, 정부 지원, 수출 지원 등이고 간접 혜택은 경제개혁을 위한 시범 역할을 하면서 기술 이전과 현대적 경영의 사례 발굴, 수출품 다각화, 무역효율 증진, 녹색성장 촉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경제특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중국의 각 성에는 최소 두 개의 경제특구가 존재한다. 중국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도시에 세계개혁, 노동시장, 가격정책 등 다양

한 정책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효과로 중국 내 메가시티 7개 정도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전국 GDP의 22%, 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60% 여성 일자리)했다. 중국 내 10개 경제특구는 베이징 중관춘 하이테크 단지, 상하이 장강 하이테크파크, 수저우 산업단지, 광저우, 우한 하이테크 단지, 뉴하이테크 개발특구, 칭다오 경제기술무역구 등으로 이곳들은 2016년 기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자 경제지표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곳이다.

한중일 성장거점의 협력을 위한 분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혁신은 가장 중요한 협력분야이며 모바일 기술과 관련된 분야와 기술 훈련, 교육과정 개발 및 단기 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인력개발과 지식 공유, 기업의 가치사슬 연결, 서비스 산업 개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플랫폼 발전 등이다. 이러한 한중일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하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면서 지역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개국 간 정기적인 경제특구 포럼을 개최, 3국 간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2~3개의 경제특구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시작하고 이러한 활동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기구가 참여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더욱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아베 가츠토모** 일본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s, NDPs)은 일본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정하는 계획이었다. 1960년대에 이미 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철강, 석유화학 등 신규 사업도시 구축을 계획했다. 제1차 NDP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접근법은 새로운 산업도시 및 기타특별경제구역이었다. 새로운 산업도시는 콤비나트, 석유 화학단지과 같은 중공업/화학 제품 제조단지가 목표다. 이 계획은 생산 기지를 분권화하려고 시도했으며, 정부는 항구,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에 막대한 투

자를 했다. 이 계획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제2차 NDP는 1969년에 출범해 1975년을 목표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촉진하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완전하게 구체화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주로 오일쇼크와 더딘 경제 성장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NDP는 지역별 접근 방법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고 하이테크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일본은 2010년 이후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3년에 통과된 국가전략특별구역(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이 설립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제활동의 축을 구축하기 위해 특정 경제활동의 규제를 해제했다. 이 법에 따라 12개 지역이 지정되어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접근법은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일본의 다른 지역들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규제가 완화된 국가전략특별구역의 성과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경제특구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건설 허가, 외국인 방문객 및 근로자에 대한 규제, 글로벌 벤처 기업 설립 등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존재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관련 비판도 존재한다. 국제적 상황에서 보면, 일본의 경제특구는 더 이상 제조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고려한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TPP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제조업 부문이 필요할 경우 해외 직접 투자를 고려하게 되는데, 한중일 경제특구에서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특히 제약 의학분야가 유망하므로 중국이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이다.

— **다케시 다마이**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올림푸스 한국 트레이닝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송도에 이 센터를 설치한 것은 우선 지역적 위치

를 고려하였고, 서울, 경기도 등의 의료교육 수요와 부산, 광주, 대구 등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의학 수준과 수술 수준이 높기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 **장은영**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2011년 9월 한중일 3국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TCS는 경제, 사회문화 등 4개 부문이 있는데, 한중일 3국에서 2년을 주기로 돌아가며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20여 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6년 TCS 미팅에서 한중일 공급 사슬 연결성에 대해 연구를 결정하고 수행한 바 있다. 공급 사슬 연결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현 단계에서 지방경제협력이 아주 중요하며 특히 경제특구 분야의 협력은 아주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TCS에서도 황해 경제협력 등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 역시 향후에도 협력이 원활하게 지속되길 바란다.

— **정형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국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중일 3개국의 협력과 무역 촉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거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Q. 키르기스스탄 정부부처 담당자 실제 투자 유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경제특구 구성에 따라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실제 경제특구 지정시 효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A. 이영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95억 달러 중 45%가 FDI 도착 규모에 해당한다. 외자 유치 효과가 크며, 부동산은 수익계약으로 제공하며 무상임대 시에는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한다.

A. 더글라스 지후아 정 경제특구는 개발도상국 메커

니즘과 산업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인천은 허브로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한 비용과 효과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한중일 성장거점 협력, 인천경제자유구역, 한중일 경제협력 거점, 중국 경제특구, 일본 국가전략특구, 신보호주의 등장,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기업 가치사슬 연계, 규제 완화, 한중일경제특구협력협의체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산업 발전 단계에서 상호 보완성과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3개 경제특구 등 성장거점은 기업 가치사슬을 연계하고, 무역 및 투자, 자본 및 프로젝트 협력, 전자상거래 및 물류 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할 수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한중일 3국 간 지방경제 협력부문, 한중일 FTA에 있어서 시범도시 역할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한중일 성장거점인 경제특구가 상생의 상호 협력을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한중일경제특구협력협의체를 상설화하고 제주포럼의 경제자유구역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연례행사를 통해 3국 성장거점인 경제특구 간 공감대와 상생 협력 방안을 상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함.
-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입된 일본의 12개 국가전략 특별구역의 지정과 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 정책은 일본 제조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부분에서 한중일 사업협력 가능성과 일본의 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특구 제도가 제약, 의학 분야 등에서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중일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CEP 플랫폼하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3개국 간 정기적인 경제특구 포럼을 개최하며, 3국 간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음.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 단계로 각 국가별로 2~3개의 경제특구를 선정,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시작하고 이러한 활동에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기구가 참여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분명히 실현할 수 있음.